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201회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 주요내용

주 제 : 사회안전망 국가비전 New paradigm for new normal  
발제자 :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  
일 시 : 2015년 10월 15일 오전 7시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 요약 >

☞ 10월 15일 201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사회안전망 국가비전 New paradigm for new normal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일반적으로 뉴 노멀은 양극화와 저성장을 의미한다. 뉴 노멀 시대는 자본주의의 위기이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복지는 자본주의에 기반을 뒀야 하지만, 복지정책의 실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여성은 가사만 담당하고, 개인소득은 근로소득 중심이라고 가정한다. 또 복지제도를 통한 계층 간 이전에 대해 무관심하다.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평균 수명이 정체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인구는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남북통일이 안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 양극화 시스템에서는 양극화를 발생시키고 있는 자가 최대의 수혜자가 된다. 리먼 사태의 경우, 미국이 가장 큰 수혜를 봤다. 불경기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같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불경기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통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보다 손해를 줄일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이미 높은 수준의 고령사회가 되었다. 평균수명은 2013년 남성은 78.5세, 여성 85.1세로 늘어났다. 1970년대와 비교해 평균수명이 20~30년 늘어났다, 건강수명은 71세지만, 평균 53세면 퇴직한다. 짧은 근로기간으로 퇴직을 빨리하면 한 개인이 적자가 되는 시점도 빨라진다. 개인이 적자가 되면 정부에서 보존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보존할 수 없다면 다음 세대가 보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하고, 일을 할 의지가 있다면 70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의 임금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2014년 우리나라 국민빈곤율은 14%로 OECD 평균 12.6%보다 높으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노인빈곤율은 49.6%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연금수급률이 현재 28%로 다른 선진국의 연금수급률 70~80%보다 낮은 수준이다.

■ 소득보장에 대해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 금융산업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복지 네트워크 모델에서 복지의 낮은 생산성은 공공부문, 바우처를 통한 민간사회복지제도 활성화로 민간참여, 나눔이라는 자발적 기여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 100세 시대에 맞는 노동개혁으로 성장형 고령사회로 나가야 한다. 은퇴시기만 늦어지는 것이 아닌 조기 교육을 통해 빨리 사회로 내보내는 조치도 필요하다. 장년 재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대학을 개방해 파트타임 입학에 활성화해야 한다.

■ 결과적으로 성장과 복지를 위한 New Paradigm은 나눔기술 자본주의인 자본주의 5.0의 형태다. 나눔기술 자본주의는 복지대상자와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 도입하면 영원한 것이라는 생각보다 일몰형 유연한 복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지와 고용을 통합해야 한다. 소득이 있어야 복지 의존에서 탈피하여 독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와 고용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

## ■ 뉴 노멀(new normal) 사회, 현실적인 복지정책으로 극복해야 : 복지정책 가정의 오류 - 여성은 가사 담당, 인구증가와 평균 수명 정체

- 일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생각은 변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복지 대상자는 통상 소득계층 하위 15~20%까지로 보는데, 복지는 복지 대상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많이 줄수록 좋아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신이 못 사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에서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욕구들이 있다. 이러한 욕구들이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지만 복지가 이러한 변화에 맞추지 못한다면 복지지출은 결국 허공에 쓰는 사회적 비용이 된다. 변하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나 빈곤층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대안이 없는 부분일 수 있다. 뉴 노멀(new normal)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지정책을 추구하며, 해결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뉴 노멀은 양극화와 저성장을 의미한다. 양극화는 풍부한 자본과 정보, 기회를 통해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이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낮은 소득증가율로 인한 빈곤의 고착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그 격차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저성장으로 현재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2% 경제성장률과 장기재정전망도 1% 성장률을 내다보고 있다.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생산 중단이 반복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뉴 노멀의 두 가지 개념 외에 고령사회와 구조적인 정부재정 적자를 추가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고령사회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30년 이상 고령사회에 대한 투자를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 또한 남유럽형 뉴 노멀이라는 구조적 정부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도 대비해야 한다.

- 뉴 노멀 시대는 자본주의의 위기일 수 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복지는 자본주의에 기반을 두어야 하지만, 복지정책의 실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 번째로 여성은 가사만 담당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력은 필요하며 가족 중심의 복지체계를 만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개인소득이 근로소득 중심이라고 가정한다. 실질적인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나오기 보다는 다양한 자본 속에서 형성 및 축적된다. 세 번째는 복지제도를 통한 계층 간 이전에 대해 무관심하다. 이는 기회의 형평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평균 수명이 정제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인구는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은 1년에 6개월씩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이 안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통일이 되었을 때 복지제도의 북한 적용은 즉시적이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은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했고, 소득성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빈곤층을 외면한 정책으로 빈곤층에 대한 상대적 분배정책이 취약했다. 또한 정보와 기회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계층은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빈곤계층은 악화되고 있다.

## ■ 복지 수요 증대, 복지비용 효과적으로 지출할 시스템 마련돼야

### : 우리나라 국민빈곤율 높아...복지 확대에도 만족감 높지 않아

- 뉴 노멀 시대의 양극화 문제는 가계소득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2012년 현재 가계소득은 국민총소득의 62.3%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1980년대 연평균 16.9%, 1990년대 13.0%, 2000년대 5.9%로 감소 추세다. 이 수치는 우리 사회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경제 상황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계소득 하락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의 소득유입 약화, 고용유발계수 하락 등 여러 원인이 있다. 해결방안은 첫째, 수출 내수 제조업 서비스업 간의 불균형 완화로 내수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둘째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전통서비스업의 대형화, 전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해야 한다.
- 다른 양극화로는 임금 양극화, 건강 양극화, 교육 양극화 등이 있다. 임금 양극화는 정규직의 경우 노동조합이 앞서서 지속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 양극화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강이 악화되면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자발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문제는 의료보장, 진료보장이 아닌 아팠을 때 소득 상실분에 대한 질병급여라는 점이다. 교육 양극화는 공교육의 한계 때문이다. 공교육의 한계는 사교육의 증가와 고비용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대학 재수와 취업난으로 대학을 5~6년 다니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20대는 가장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연령이지만 재수, 취업과 공기업 재수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 사회적 기회의 양극화는 고소득층, 학벌, 지연의 이해집단에 의한 보이지 않는 차별

이 존재하며 일자리 대물림 등으로 사회적 배제가 문제되고 있다.

- 주거 양극화는 정부에서 주거보유율 100%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중과세를 통한 다주택자 억제는 전세난을 유발했으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수명단축과 아파트 질 저하를 초래했다. 주택 공급의 문제가 아닌 주택 서비스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이러한 양극화 시스템은 결국 양극화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의 수혜자가 된다. 리먼 사태의 경우, 통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큰 수혜를 봤다. 미국에서 발생했지만 미국이 최대의 수혜자가 된 것이다. 불경기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같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불경기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통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보다 손해를 줄일 수 있다.

- 뉴 노멀 시대의 다른 문제로는 저성장하에서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 확대, 고령사회 등이 있다. 저성장하에서의 고소득층은 풍부한 자본, 정보, 기회 등으로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낮은 소득증가율로 인해 빈곤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 스피드 경쟁도 문제가 되고 있다. Fortune 500에 포함되는데 평균 시간이 1930년대 70년 걸리던 것이 2015년에는 15년으로 줄어들었다. 또 CEO의 평균재임 기간도 2000년 평균 10년에서 2015년 5년으로 줄었다. 급변사회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정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 중 하나인 고령화 사회 문제는 통계상으로는 고령화 사회지만 실제 현상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고령사회가 되었다. 1970년 평균수명은 남성 58.7세, 여성 65.6세에서 2013년 남성은 78.5세, 여성 85.1세로 늘어났다. 40년 사이 평균수명이 20~30년 늘어난 것이다. 건강수명 또한 71세로 이때까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평균 53세면 퇴직을 하는 것이다. 정년퇴임 후에도 15년의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이렇듯 짧은 근로기간으로 퇴직을 빨리하게 된다면 한 개인이 적자가 되는 시점도 빨라진다. 개인이 적자가 되면 정부에서 보존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보존할 수 없다면 다음 세대가 보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하고, 일을 할 의지가 있다면 70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의 임금 기준도 개선해야 하는데 전체 정규근로자 임금수준이 260만원인 데 비해 60세 이상의 임금수준은 약 100만원이다. 차비와 식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어 노인들이 일을 할 요인이 못 된다.

- 2014년 우리나라 국민빈곤율은 14%로 OECD 평균 12.6%보다 높으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노인빈곤율은 49.6%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현재 베이비붐세대는 과거와 다르게 더 빈곤한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짧은 근로기간, 자녀의 사교육비와 주거비로 인해 저축여력이 낮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등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연금수급률이 현재 28%로 다른 선진국의 연금수급률 70~80%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급액도 2014년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는 86만 7천원, 10~19년 가입자는 40만 8천원이지만 50대 중반 베이비붐세대의 평균연금가입기간은 10년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평균 48만원이다. 국민연금 수급액 혹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가 늘어난다면 노인빈곤율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 고령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핵

가족화와 기업 입장에선 사회복지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어 복지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970년부터 노인시설, 노인주거시설, 실버타운 건설 등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70년 경제성장에 모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투자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맞춤형 제도를 시행하지 못해 효율적이지 못했다.

- 내년 정부 부채는 645조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40%를 차지한다. 정부 부채가 늘어난 이유로 복지 예산 증가를 들 수 있다. 복지 예산은 2009년 75조원에서 2016년 123조원으로 70%가 증가했다. 20016년 예산 적자규모와 같을 만큼 복지 예산이 증가했다. 복지비가 증가한 만큼 적자 또한 증가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 복지비를 더 효과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 부채는 적자재정을 통해 산업투자를 함으로써 성장의 동력이 되었지만 현재의 적자재정은 투자형 적자가 아닌 복지지출에 의한 소비성 적자로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소득분배형이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초생활제도와 무상복지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무상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상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복지지출의 절감 노력이나 세금을 거둘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정치 포퓰리스트들은 복지제도를 넓히려 하고 있다.

**<주요국 공적 사회지출 증가율 추이> (% , 실질증가율)**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09/ 2000
스웨덴	0.16	1.59	2.06	-0.72	0.13	2.85	121.8
노르웨이	-7.14	-4.71	-3.79	3.64	-3.27	15.73	126.1
덴마크	0.34	0.97	1.01	-0.81	0.46	6.16	119.6
스페인	3.73	4.95	4.15	4.66	8.05	9.41	158.2
이탈리아	3.46	2.10	2.62	0.78	3.09	1.86	122.5
그리스	4.48	7.85	6.53	4.12	2.92	3.88	158.2
영국	4.18	2.76	1.55	2.73	4.95	7.27	149.5
미국	3.99	2.40	3.62	3.18	4.18	9.88	152.1
한국	-14.73	11.51	20.69	8.14	11.63	14.94	281.5
한국제외평균	1.65	2.24	2.22	2.20	2.56	7.13	138.5

- 위의 표와 같이 복지제도의 문제는 2000년도 북유럽에서도 큰 위기였다. 북유럽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복지비는 120%증가 했지만 우리나라는 300%로 빠른 증가를 보였다.

- GDP대비 정부지출에 대한 연금 부담의 추계를 보면, 스웨덴의 경우 2060년까지 변화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2060년 6배 이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 소득재분배 효과로 스웨덴의 경우 2010년 소득재분배 이전 28%에서 소득재분배 후



9%로 낮아져 복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재분배 전과 후는 17%에서 15%로 빈곤율을 거의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어느 정도로 비효율적인지를 보여준다.

## ■ 복지를 위한 산업 ‘복지 네트워크’ 모델

### : 공공부문, 민간참여, 자발적 기여가 조화 이뤄야

- 사회안전망 국가비전의 hardware를 산업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성장은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이러한 성장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점을 복지를 위한 산업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기업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산 시스템 혹은 제품 구성을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너무 가파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전부 완만하게 바꾸고, 건물에는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길거리의 간판들도 지금 글자의 2배 이상 크게 하는 등 생산에 연관해서 바라 봐야 한다.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면 투자유발로 고용 창출과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시장에서 노인들이 고용되는 수준이 경직화 되어 있고, 연금시장도 부실하다. 세계경제포럼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87위로 평가할 만큼 낙후된 금융시장을 갖고 있다. 연금은 금융산업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은 오래되고 큰 금융기관에 연금을 맡겨야 한다. 개인이 2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80년 동안 거래를 해야 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발달해야 우리의 연금기금도 계속 커질 수 있을 것이다.
- 의료시장에서도 공적 의료로 인해 의료시장의 많은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의료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의료 시장 혹은 선진화된 의료 시장이 형성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건강보험을 위한 원격 의료와 영리 병원으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교류의 문제 등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다.
- 안전산업은 저개발일 때, 경제수준이 낮을 때는 문제되지 않는다.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화 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안전문제는 저개발국일 때와는 다르게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안전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산업과 복지 시스템이 결합된 복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복지는 복지 그 자체였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복지 제도가 들어왔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복지 부문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느냐에 따라 다른 관련 산업들이 발전하게 된다.
- 복지 네트워크는 크게 소득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종축은 소득시장에서 소득을 얻는다면 그 소득을 저축하기 때문에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이 연관되어 있고, 횡축은 생명과 연관된 의료시장과 안전산업이다.
- 소득보장에 대해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 금융산업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정년폐지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안정적 고용을 통한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 의료보장은 의료보장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개인의 노력을 유인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든지 아프면 좋은 입원실, 좋은 혜택을 주는 비용보다 오히려 건강하도록 유인을 하고 아픈 경우 의료를 보장을 한다면 오히려 의료비를 더 절감하는 결과가 나올 것

이다.

<복지 네트워크 모델>



- 복지 네트워크 모델에서 외곽마름모는 산업안전, 금융, 의료, 노동시장이다. 외곽과 내부 마름모의 중간은 민간건강보험, 민간연금, 민간산재보험 등 민간 사회안전망이고, 내부마름모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노인요양보험 등 공공사회안전망이다. 내부마름모는 의료급여, 공공주택, 실업부조 등 사회서비스와 중심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복지 네트워크에서 복지의 낮은 생산성은 공공부문이, 바우처(voucher)를 통한 민간사회복지제도 활성화로 민간참여를, 나눔이라는 자발적 기여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 ■ 100세 시대 맞는 노동개혁으로 성장형 고령사회로 나가야

### : 청년 폐지 또는 연령 조정해야...장년 재교육 대학 파트타임 입학제 허용해야

-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기부’보다는 ‘나눔’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기부는 단순히 주는 것, 나눔은 같이 나눠줌으로써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 두 번째는 Exclusion에서 Inclusion으로 변화해야 한다. 성장vs복지, 청년층vs노년층, 1vs99, 갑vs을, 정규직vs비정규직 등 모든 것을 계층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협동, 포용을 해야 한다. 문제는 포용정책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오히려 포용이 아닌 서로의 이해득실을 다투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제민주화는 내부자 거래의 제한을,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의 왜곡을 일으켰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업종의 선정에 따라 국내 기업은 막고 해외 기업은 허용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또한 복지제도를 수행하는데 있어 대상 그룹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의료보장은 저소득층 의료접근도 개선 및 건강상태의 개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산층 육성을 위한 기회보장과 기업복지를 활성화해야 한

다. 또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책임의식 고양과 예방중심의 사회보험제도가 필요하다.

- 노후소득보장에서 노후보장으로 변해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과 같이 계속해서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가 안정될 수 있는 노인 의료보장, 노인 요양 보장, 노인 주거 안정 문제를 중심으로 돈이 아닌 서비스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100세 시대에 맞는 노동개혁으로 성장형 고령사회로 나가야 한다. 은퇴시기만 늦어지는 것이 아닌 조기 교육을 통해 빨리 사회로 내보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교육비와 예산을 절감하는 첩경이며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년을 폐지하거나 은퇴연령을 조정하고, 고령자 편의작업장과 생활환경, 장년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미국의 경우 대학생 30%가 파트타임 학생이다. 장년 재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도 대학을 개방해 파트타임 입학을 활성화해야 한다. 야간에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되면 장년층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들에 대한 고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 창업은 청년들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년층이나 고령자들이 하는 것이 정상이다. 돈, 능력, 경험이 있지만 장년, 노년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청년창업에만 지원하고 있다. 또 투자비용을 날리는 것을 마치 실패비용, 성공을 위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장년의 자금력과 청년의 활동력을 조합시키는 장년창업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창업 성공률이 고령자 층이 청년층에 비해 훨씬 높다.

- Generation to Generation(G2G) government 에서 Pay-go government로 변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적자를 후세들에게 남겨주는 정부시스템을 갖고 있다. 글로벌 경제하에서 재정적자는 주요 국가경쟁력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국가, 기업, 가계부채의 관리가 필요하다. 부채관리를 하면서 부양효과가 적은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 삭감분으로 부양효과가 큰 부분에 더 투자를 하면 경기가 회복될 때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Pay-go government로 변화해야 한다. 또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문제까지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통일에 대비한 복지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통일 후 적용이 불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제도도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GDP와 북한 GDP의 격차가 20:1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북한과 의료시설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개혁해야 하고, 사회복지제도를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라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 결과적으로 성장과 복지를 위한 New Paradigm은 나눔기술 자본주의인 자본주의 5.0의 형태다. 그 이전인 자본주의 4.0은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이미 70년도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민했던 오래된 개념이다. 자본주의 5.0의 새로운 개념인 나눔기술 자본주의는 복지대상자와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도 유연해야 한다. 한 번 도입하면 영원한 것이라는 생각보다 일몰형 유연한 복지제도를 도



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지와 고용을 통합해야 한다. 소득이 있어야 복지 의존에서 탈피하여 독립할 수 있어 복지와 고용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저렴하고 철저한 사회안전망을 사회 전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로봇, IT, BT, NT를 결합해야 한다. 다른 문제는 성장에 대한 문제다. 중산층을 육성할 수 있는 성장시스템을 가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노사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은 영원한 가족이라고 해서 평생고용을 했는데, 이미 이러한 개념이 사라진 상태다. 이러한 개념을 다시 살려야 한다. 서비스 공급자의 다원화인 공공, 민간, 사회 종교단체, 자원 봉사 단체들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 부문에 있어서도 민영화, 영리, 신기업 경영방식 도입 등을 적극화 한다면 현재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비한 생산적 복지제도 및 효율적 복지공급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201회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기업의 지적재산 탈취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 궁금하다.

**답변** 휴먼캐피탈이라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개념이 자본 축적이었고, 과거에는 실물자본에 대해서만 자본으로 여겼다. 최근 점점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를 자본주의의 개념에 포함시켜 거래를 하고 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적재산권을 인수해야하지만 거의 탈취수준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선진국의 지적자산에 대한 인식과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어 청년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해외에서 팔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사회시스템이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 부문을 강화하고 보호해줘야 한다.

**질문2** 많은 사회문제를 나열해 사회발전 정책이라는 말로 해결해야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답변**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투자는 수출이었다. 수출은 우리의 필요에 맞추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필요에 맞추는 것이다. 이제는 국내 국민들의 실생활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투자과정에서 나오는 투자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다. 재벌이면 안 되고, 정부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사회단체에서 해야 하는데 사회단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계층이 아니다. 중소기업 역시 국민들의 눈높이를 높여줄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별로 없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경쟁적인 시장이 되도록 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면 성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질문3** 한국은행에서 9월 은행권 가계대출 누적액이 615조원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회안전망의 관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답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창업에 실패하거나, 전세자금 대출, 주택대출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가계부채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 지표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저축률이 3% 밖에 안 된다. 선진국이 5~6%였고 우리나라도 높을 때는 가계 순저축률이 15%였다. 문제는 가계저축이 그만큼 낮다는 것은 통계 분포 상 적자가계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적자가계를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 수단으로 임금이 올라가야하지만 잠재적 실업 문제가 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 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비정규직이라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